



기초자치단체 문화재단, 사업적 역량을 결집할 때다

—부천시와 고양시의 차별화된
사업 시스템을 중심으로

손 경년 · 부천문화재단 문화정책실장 | 단국대
대중문화예술대학원 겸임교수

문화재단은 예전에는 예산이 제한되어 예산을 주어주어야 했지만, 새로운 문제는 계속 투여나오기 마련이다. 따라서 문화재단 운영을 주어야 하며, 운영에 대한 평가는 문화예술전문역량을 유망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의 내용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기초자치단체 문화재단 설립의 긍정적 측면

개인이 기부한 토지와 규사광업권을 기금화 하여 1998년 설립된 강릉문화예술진흥재단을 기초자치 단위에서의 첫 문화재단으로 볼 수 있으나, 이 경우 시의 출연금과 운영을 위한 예산보조가 없이 개인기부에 의존했다는 점에서 2001년 10월에 출범한 부천문화재단, 2004년 1월에 출범한 고양문화재단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부천문화재단은 기초자치단체가 출연금 및 예산지원으로 설립된 최초의 문화재단이라 할 수 있으며, 부천문화재단의 설립 이후 광역 및 기초자체에서는 적극적으로 문화재단설립을 추진 혹은 고려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서울문화재단, 고양문화재단, 과천한마당축제 등이 설립되었고, 인천문화재단, 성남문화재단 등이 올해 안으로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듯 지자체가 직접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공익성비영리 재단을 설립하게 된 동기는 그 어느 때 보다 지자체의 문화정책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문화라는 화두가 그만큼 지역에서 주요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지자체가 문화재단을 설립했다함은 민간차원에서 설립된 문화재단과는 차별적일 수밖에 없고,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보다 진화된 조직으로 이해될 필요도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 중앙의 문화정책과도 연계하여 현실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문광부가 올해 발표한 계획을 보면 공립박물관·미술관은 인구 9만 명당 1개소, 공공도서관은 인구 6만 명당 1개소, 문화의 집은 인구 5만 명당 1개소를 기준으로 하되, 문예회관의 경우 기존의 자치단체 당 1관 건립기준을 폐지하고 지역특성 및 주민요구나 수요에 적합하게 자율적으로 결정, 건립할 수 있는 Top-Down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한다.^{1) 창의한국(문화부, 2004), p.489-508 참조} 다시 말해 그간 지역문화예회관의 건립기준이 지역의 특성과 상관없는 일률적 수량화보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앞으로는 운영과 내용성에 더 충실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문화인프라에 대한 문화예술경영인력의 충

지자체내 그리고 중앙차원에서의 지형변화에 따라 문화행정에서 문화정책에 대한 요구가 문화재단 설립으로 외화되고 있는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문화재단, 특히 기초자치단체가 설립한 문화재단의 주요사업을 보면 문화재단의 본질적 기능을 이해하고 도입하는데 있어서 약간의 간극이 있는 듯 하다. 즉 기초자체가 문화재단을 통해 ‘공익성’과 ‘재정자립도’라는 다소 모순적인 지향점을 한꺼번에 버무려 만족시키고자 하는 조급증을 보인다는 것이다.

원이 요구될 수밖에 없다는 게 앞으로의 전망이다.

사실 그간 기초자체에서는 중앙의 정책에 따라 공연에 적합한 공간인지 아닌지는 뒤로하고 일단 국·도비를 지원 받아 문예회관을 짓고, 자극히 관료적이고 비전문적인 관점으로 운영을 해 왔다고 말해도 어느 누가 아니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하다 보니 전국적으로 세종문화회관 ‘꺽통’ 같은 외관의 문예회관이 도시의 문화적 권위를 억지로라도 높이기 위해 주변경관과는 상관없이 독아청청(!) 서 있는 것을 전국 어디서나 볼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모든 분야의 중앙집중화가 압축적으로 이루어진 성장과정과 궤를 같이 해 왔으며, 기초자치단체는 재정 및 인적자원의 열세로 인해 국가보조금이나 지방교부금 등에 의존하지 않고는 사업의 실행 및 유지가 힘들다는 현실을 인정한다면 엄밀한 의미로 보아 ‘무늬만’ 지방자치인 격이라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아무리 행정 관료의 완고함이 무쇠보다 더할지라도 풍파에 마모되는 것을 피할 수 없듯이, 중앙정부의 변화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감지된다. 이렇듯 중앙정부가 행정조직혁신을 국가별전전략의 주요사업으로 설정하고 있는 만큼 기초자체도 이에 따른 선진적인 문화행정, 문화정책이 요구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모두에서 언급했듯이 지자체내 그리고 중앙차원에서의 지형변화에 따라 문화행정에서 문화정책에 대한 요구가 문화재단 설립으로 외화되고 있는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문화재단, 특히 기초자치단체가 설립한 문화재단의 주요사업을 보면 문화재단의 본질적 기능을 이해하고 도입하는데 있어서 약간의 간극이 있는 듯 하다. 즉 기초자체가 문화재단을 통해 ‘공익성’과 ‘재정자립도’라는 다소 모순적인 지향점을 한꺼번에 버무려 만족시키고자 하는 조급증을 보인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문화재단’이라는 명칭이 가져다주는 융통성이 오히려 재정자립도나 재원조성이라는 기능을 지나치게 요구

기초자치단체가 설립한 문화재단의 목적 및 사업내용

재단명	설립년월	설립목적	대상사업	비고
부천문화재단	2001년 10월	지역사회 발전과 부천시민의 생활문화 진흥 및 문화복지의 증대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	1. 부천시립시골문화센터의 운영 및 관리 2. 부천시사립회관, 오정아트홀의 운영 및 관리 3. 문화예술 관계 자료의 수집·관리, 보급과 조사연구 4. 기타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이사장 : 부천시장 상임이사 : 이사회 의결과 시의회 동의를 얻어 시장이 임명
고양문화재단	2004년 1월	시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 창달에 기여할 수 있는 문화 예술 공간의 운영 등을 통해 고양 시민의 문화 복지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	1. 문화센터 운영 2. 문예회관 운영 3. 공연예술 진흥 및 작품 활동과 그 보급 4. 문화예술 관계 자료의 수집·관리·보급 및 조사·연구 5.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이사장 : 고양시장 상임이사 : 공채
재단법인 과천한미당축제	2004년 1월	모범적인 도시축제 확립 수준 높은 문화향유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부응, 시민들의 문화적 공동체 의식 함양, 효율적인 축제경영	한미당축제의 운영 및 이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	과천시의 핵심적인 축제인 과천한미당 축제를 보다 전문적이고 자율성 있는 조직으로의 전환을 위해 기금을 조성, 이를 재단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임
강릉문화예술 진흥재단	1998년 11월	지방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 활동, 시설지원과 전통문화 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예술을 창조하여 지역문화창달에 이바지	1. 전통문화예술의 전승과 현대문화예술 창작보금 지원 2. 향토사의 조사, 연구와 사료의 수집보존과 지원 3. 지역문화예술에 관한 자료수집, 국내외 교류와 지원 4. 지역문화행사의 개발, 개최 및 지원 5.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과 지원 6. 문화예술인의 후생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과 지원 7. 지역문화예술 육성발전을 위한 시설 긴급보수, 지원	재일동포 김순자 씨가 기탁한 토지를 매각(1,164백만원)한 금액과 현 이사장인 대원그룹 박도문 씨의 규사장업권(950백만원)을 기금으로 재단 출범한 예임

문화재단의 중심적 역할은 지역의 문화정책연구 및 제안 기능, 기금사업 기능,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지원사업일 것이다. 그러나 부천시와 고양시의 경우 이것이 목적사업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그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면 문화예술 공간운영에 최우선을 두고 있으며, 시가 주최하는 다양한 문화예술 관련사업에 대한 지원 및 위임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이유로 재단에서 가장 비중이 큰 업무는 '시설관리'와 '문화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이 되고 있다. 이와 함께 여전히 기초자체 문화예술담당과의 정책형성 및 진행에 있어서의 권한이 크기 때문에 문화재단이 정책연구를 통해 지역에 적절한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구조라기보다는 시에서 필요한 정책에 대한 이론적 기반의 제공 정도로 머물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지역의 문화예술 관련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가능 또한 요구되면서 사실상 문화재단이 지역의 문화예술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으로서의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자체에게 있어서 재단법인이 다소 생경한 조직일 수도 있으나 다른 한편 그간 '비전문적 행정가'들이 문화예술공간을 '엉터리'로 운영한다는 지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내심 이를 발전된 조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

기초자치단체 문화재단의 사업역량과 성격

문화재단의 위상

현재 기초자치단체가 설립한 문화재단의 위상은 설립목적과 대상사업을 보면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가 보다 구체적으로 보인다.

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문화재단의 목적 및 사업 내용>에서 보면 부천시, 고양시의 경우 ‘문화도시’ 또는 ‘문화예술의 도시’라는 시정의 방향에 부합하기 위한 포괄적인 명시를 설립목적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반해 과천시는 ‘한마당축제’라는 구체적인 목적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의 두 도시와 구분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우선, 부천시와 고양시 등 두 기초자치체의 지역문화예술 진흥조례 및 문화재단설립및육성조례를 살펴보면, 시 산하 문화관련 시설 및 사업의 위탁운영, 지역문화행사의 개발·개최 및 지원, 지역의 문화예술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조사사업 등의 영역이 사업대상이다.

사업대상이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히 광범위해 보일 수도 있는데 이는 광역자치단체와는 달리 기초자치체의 경우 문화정책개발이나 연구조사사업을 수행할 인적자원 및 조직이 없다는 점과 지방 행정가들의 문화적 전문성이 그리 높지 않은 탓에, 당장 제기되고 있는 문화공간운영의 문제점 및 문화예술관련 담론을 문화재단을 통해 어느 정도 흡수·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단순한 판단에서 출발하고 있는 듯하다.

법규상으로만 살펴본다면 강릉문화예술진흥재단은 개인 기부금의 이자수익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규모가 크지 않아서 현재는 연구조사사업과 예술인 및 예술단체 지원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부천문화재단과 고양문화재단은 기금지원사업 보다는 지역문화예술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등 기초자치체의 문화재단의 위상은 문화예술영역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지역문화예술 관련 제반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있다고 볼 수 있다.

기초자치단체 문화재단의 중심적 역할—정책, 기금, 지원

대개 문화재단의 중심적 역할은 지역의 문화정책연구 및 제안 기능, 기금사업 기능,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지원사업일 것이다. 그러나 부천시와 고양시의 경우 이것이 목적사업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그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면 문화예술 공간운영에 최우선을 두고 있으며, 시가 주최하는 다양한 문화 예술 관련사업에 대한 지원 및 위임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이유로 재단에서 가장 비중이 큰 업무는 ‘시설관리’와 ‘문화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이 되고 있다. 이와 함께 여전히 기초자치체 문화예술담당과의 정책형성 및 집행에 있어서의 권한이 크기 때문에 문화재단이 정책연구를 통해 지역에 적절한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구조라기보다는 시에서 필요한 정책에 대한 이론적 기반의 제공 정도로 머물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기초자치체 문화재단에서 중요한 기능은 정책연구여야 한다는 것이 현장에서 제기되는 요구사항이다.

기금의 측면을 부천시의 예를 들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천시 문화예술 발전기금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손경년·황윤미 저음, 부천문화재단 문화정책실, 2003) 참조. 현 재 부천시는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1995년 6월 ‘부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및운용조례’에 의거한 문화예술발전기금을 설치, 이를 지역예술가 및 예술단체 지원에 사용하고 있다.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 수익금, 기타 잡수입으로 조성하며 출연금은 1999년까지 출연한 출연금 이외에 2001년도부터 2010년까지 20억원을 추가로 출연하여 총 50억원을 출연할 계획이다. 2003년 현재 부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으로 총 38억원이 조성되어 있다.

대개 전국대회나 규모가 큰 문화예술행사 부천시의 5대 문화사업인 ‘복사
글예술제’, ‘부천민티스티ング화제’, ‘부천국제대학이나메이션페스티벌’, ‘부천문화정보센터’, ‘부천필하모니오케스트라’ 등은 일반회계예산에 편성하여 지원되고 있다. 는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소규모 문화예술행사나 사업의 경우 부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부천문화재단 설립 초기에

지역에서 봉착하는 가장 큰 난제로 ‘전문인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와 ‘배타적 문화지역주의를 어떻게 타파할 것인가’라는 점을 들 수 있다. 사실 중앙과 역량 결집도를 비교하면 지역은 그야말로 황무지나 다름없다. 대개의 고급인력들을 지역에 끌어들 만한 환경도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역 내에서 민간의 문화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구들이 없었던 것이 그간의 사정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덧붙여 지역의 토호세력들의 중앙에 대한 피해의식이 오히려 지역의 문화정치권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도 참으로 힘겨운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기금사업을 문화재단이 하도록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 공청회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된 적이 있었는데, 문화재단이 기금관리를 하게 되면 ‘옥상옥’의 권력기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지역예술인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던 이유로 기금 사업은 제외되었다.

지원의 측면에서 보면, 공간운영과 문화사업을 중점적인 업무로 잡고 있는 부천문화재단과 고양문화재단의 경우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함과 동시에 지역예술인을 참여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 공간의 제공 및 지역밀착형의 찾아가는 프로그램의 기동 등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부천의 경우 지원의 대상이, ‘문화복지’의 실현이라는 대전제 하에서, 아마추어 동아리 모임에서부터 전업예술가에 이르기까지 그 스펙트럼이 넓은 편이라 할 수 있으며, 재정 지원 보다는 공간지원이나 프로그램지원으로 치중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간의 문화적 역량

지역에서 봉착하는 가장 큰 난제로 ‘전문인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와 ‘배타적 문화지역주의를 어떻게 타파할 것인가’라는 점을 들 수 있다. 사실 중앙과 역량 결집도를 비교하면 지역은 그야말로 황무지나 다름없다. 대개의 고급인력들을 지역에 끌어들 만한 환경도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역 내에서 민간의 문화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구들이 없었던 것이 그간의 사정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덧붙여 지역의 토호세력들의 중앙에 대한 피해의식이 오히려 지역의 문화정치권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도 참으로 힘겨운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전문성을 갖춘 외부 문화예술 전문가가 지역으로 들어오기도 힘들 뿐 아니라 들어왔다손 치더라도 지역 문화예술 관련자들과의 네트워크가 그리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외부에서 문화예술 전문가를 데려온다면 물론 무슨 기준으로 전문가를 구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수도 있



을 것이다. 이에 대해 한마디로 원하는 답변을 줄 수 없는 것도 사실이지만, 바로 그런 점에서 지역의 문화행정가들이 핵심역량을 볼 줄 알고, 이들을 지역에 동화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도 절실한 것이다.

문화재단은 이런 측면에서 시 관료조직이 포괄할 수 없는 전문 인력을 제도적으로 유입할 수 있는 조직이다. 또한 지역의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또한 지역에서의 요구수준과 어떻게 조율하는가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행정의 문화적 역량

일반적으로 기초자치단체의 문화행정역량은 문화정책형성과 집행 그리고 이에 대한 효과성, 효율성 분석 및 피드백의 과정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못할 뿐 아니라 문화예술공간에 대한 조아한 이해 및 일반시설관리 정도로 생각하는 문화예술 공간운영에 대한 저급한 인식 등으로 그 수준을 측정할 수 있다.

그나마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이러한 문제를 타파해 나가

고자 하는 기초자체의 경우는 일정정도 타 지역과 차별되는 문화행정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민간과의 파트너십을 어떻게 구축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낫다보니 문화재단을 시 소속의 한 기관으로 인식하여 감독·관리의 대상으로 본다는 것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생각된다.

넘어야 할 문턱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 문화재단은 사실 많은 문제점을 배태하고 있다. 시설관리공단이 문예회관을 맡아서 운영하던 시절과는 확연히 다른 운영시스템을 정착시키고 있다는 점에서는 분명 행정관료나 시민들에게 자극과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나, 현행의 위상이나 사업역량, 성격, 장기적 비전은 손 봐야 할 것이 많다는 것이다.

우선 문화재단 지역문화예술진흥이라는 본연의 성격을 토대로 현재 문화재단의 사업으로 범주화되어 있는 다양한 영역을 '핵심과 부심'의 방식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즉 '공공성'을 갖되 '상업성'에 휘둘리지 않는 차별적인 사업영역



과천한마당축제 _ <타이타닉> 무너지는 산업사회를 향한 블랙유머



과천한마당축제 _ <까밀라> 환경파괴에 대한 경고



앞으로 광역이든 기초이든 문화재단의 설립은 계속될 것 같다. 그러나 ‘문화재단’은 어떤 의미에서 문화지형의 변화에 따른 요구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앞으로 또 다른 이름을 가진 보다 나은 시스템이 필요하다면 그 명칭에 구애받지 말아야 할지도 모른다.

다시 밀해 현행의 문화재단들의 성과는 절대적인 이상형이 아니라는 것이며, 오히려 각 기초지자체의 특성이나 역량에 맞는 새로운 모델로의 적극적인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본다.



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수립을 위한 연구조사사업, 재정·행정·서비스·문화예술교육 등의 지원사업 등이 핵심사업이 되어야 하며, 문화사업 및 문화예술공간의 운영 등에 대해서는 민간에 대폭 이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본다. 물론 이 경우 지역의 민간역량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나, 언제까지 역량부족을 탓하며 관에서 모든 것을 주도할 수는 없다는 점도 생각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중앙-광역-기초의 층위에 따른 역할과 기능을 보다 고민해야 할 것이다.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식이 아닌, 기초지자체의 특성에 맞는 문화정책의 형성 및 집행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주요한 파트너로서 문화재단을 활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행정역량을 키우는 것도 함께 따라가 주어야 하는데 현행 문화예술과의 순환보직문제를 다시 한 번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세무담당 공무원처럼, 문화예술담당 전문공무원을 문화재단의 전문인력과 파트너십을 이루어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현재 기초이건 광역이건 ‘문화재단’ 설립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그 필요성을 생각하면 무척 고무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언급한 것처럼 마치 재단을 ‘만병통치약’처럼 여겨 만들어 놓으면 만사형통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문화재단은 여전히 발전이 필요한 조직이며, 한 번 가동된 조직은 앞으로 나간다 하더라도 새로운 문제는 계속 튀어나오기 마련이다. 따라서 문화재단 운영을 위해 민간 문화예술 전문역량을 유입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자율성을 주어야 하며, 운영에 대한 평가는 사업의 내용으로 판단하고 이를 반드시 책임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재단에 대해 대개의 지자체는 기금조성을 합법화하여 시재정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조직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재단은 공적기금을 잘 활용하고 운용하기 위한 기구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지, 사기업이나 기업재단처럼 이윤을 창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 절대 아니다.

그런 점에서 오히려 지자체는 안정적인 예산지원구조를 확보해야하고 사업내용에 대한 전문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공적기금운용에 대한 철저한 피드백 장치를 갖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본다.

앞으로 광역이든 기초이든 문화재단의 설립은 계속될 것 같다. 그러나 ‘문화재단’은 어떤 의미에서 문화지형의 변화에 따른 요구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앞으로 또 다른 이름을 가진 보다 나은 시스템이 필요하다면 그 명칭에 구애받지 말아야 할지도 모른다.

다시 밀해 현행의 문화재단들의 성과는 절대적인 이상형이 아니라는 것이며, 오히려 각 기초지자체의 특성이나 역량에 맞는 새로운 모델로의 적극적인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지역문화예술을 지원하고 활성화시키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문화행정 및 정책입안자는 부디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